

# JEJU FORUM REVIEW

---

##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조건

reports

제재와 협상, 균형점은?  
선택기로의 한반도

---

interview

이브 티베르기앵  
연쇄통  
문정인

---

2016-2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 JEJU FORUM REVIEW

제2호 | 2016-2

---

## prologue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2

---

## reports

01 제재와 협상, 균형점은? 6

02 선택기로의 한반도 14

---

## interview

이브 티베르기앵 22

연쇄통 26

문정인 28

##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2016년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은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Asia's New Order and Cooperative Leadership)’이란 주제 아래 이 시대 새로운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국가·지역 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라는 말이 있듯 아시아가 국제사회 주역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가치와 질서 창출에는 협력적 리더십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역사적으로 국제사회 주역은 군사·경제력 같은 하드 파워뿐 아니라 가치와 질서를 선도하고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소프트파워를 수반할 때 제 구실을 다했다. 이제 아시아가 협력적 리더십의 중심점이 돼 다양한 계층·민족·문화를 포용하고 통합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2017년은 새 유엔 사무총장 취임, 미국 등 주요국 리더십 교체, ASEAN 출범 50주년, 브렉시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이행, 기후변화협정 Post 2020 등 범세계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제주포럼의 주요 시사점을 요약 정리한 <제주포럼 리뷰>가 격변의 시대를 헤쳐나가는데 하나의 지침이 되었으면 한다.

2001년 출범한 제주포럼은 매년 5월 전·현직 국가지도자, 오피니언리더, 정책입안자, 언론인 등 세계 지성이 한자리에 모이는 다자협력 논의의 장이다.

<제주포럼 리뷰>는 올해 제주포럼에서 논의된 주요 사안을 7개 키워

드로 정리, 연관성 있는 내용을 묶어 네 권으로 엮었다. 각 권은 주제별 정책제안 성격의 요약 보고와 주요 연사를 직접 만나 관련사항에 대해 들은 인터뷰로 구성됐다.

2016-1호는 ‘아시아, 협력의 중심에 서다’를 주제로 협력적 리더십과 한중일 3국 협력을 다뤘고,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창립자 요한 갈통(Johan Galtung) 박사와 양허우란(Yang Houlan) 한중일3국협력사무국 사무총장 인터뷰를 실었다. 2호는 ‘비핵화와 평화통일의 조건’을 주제로 핵 안보와 한반도 통일 관련 시사점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옌쉐퉁(Yan Xuetong) 칭화대학교 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 이브 티베르기앵(Yves Tiberghien)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아시아연구소장 인터뷰를 담았다.

3호는 ‘위기의 한국경제, 혁신이 답이다’를 주제로 경제 혁신을 위한 민관 협력, 기업 인권, 지원 방안들을 다뤘고, 세타풋 수티와르트 나루에푹(Sethaput Suthiwart-Narueput) 태국미래재단 대표이사, 유안 그레이엄(Euan Graham) 로위국제정책연구소 국제안보연구부장, 제프리 킬(Geoffrey Till) 킹스칼리지런던 명예교수 인터뷰를 게재했다. 4호는 ‘지속가능 개발의 최전선, 제주’를 주제로 글로벌 제주 발전전략을 환경, 문화 관광 측면에서 다루고, 김숙전 주유엔대표부 대사와 셴딩리(Shen Dingli) 푸단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부원장 인터뷰를 실었다.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 reports

01 제재와 협상, 균형점은?

02 선택기로의 한반도

## 01 제재와 협상, 균형점은?

1970년에 발효된 핵확산금지조약(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Weapons, NPT)은 193개 유엔 가입국 중 191개국이 가입한 범세계적인 핵 관련 조약이다. NPT가 인정하는 핵보유국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5개국이다. NPT에 가입하지 않아 이 체제에 속하지 않는 핵보유국으로는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있다. NPT 체제 내에서 핵을 개발한 국가로는 이란과 북한이 있는데, 협상을 통해 개발을 중단한 이란과 달리 북한은 체제 탈퇴를 선언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비핵보유국과 잠재적 핵개발국까지 포함하면 핵 문제를 둘러싼 각국의 입장과 이해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이에 따라 핵 통제도 핵 안보(Nuclear Security), 핵 군축(Nuclear Disarmament), 핵 비확산(Nuclear Non-Proliferation)으로 나뉜다. 핵 안보는 개인, 테러집단 등 비국가행위자의 핵무기 및 핵물질 소유를 저지하려는 조치를 말한다. 핵 군축은 기존 핵보유국들이 보유한 핵무기 수를 줄여나가는 것이고, 핵 비확산은 NPT가 인정하는 핵보유국이 아

닌 다섯 국가의 추가 핵 개발을 방지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핵 문제는 일순간에 해결하긴 어렵지만 평화를 위해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자칫하면 공멸을 불러올 수 있는 핵을 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핵안보정상회의(Nuclear Security Summit),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 개별 국가와의 핵 협상 등 끊임없는 노력을 해 왔다.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구축에도 핵 통제는 핵심과제다. 전 세계 원자로의 4분의 1이 있는 동북아시아는 핵 안보 위협이 높아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국제적 책임이 요구된다. 제11회 제주포럼에서는 효율적인 핵 통제를 위한 협력적 리더십 구현을 모색하는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 핵안보정상회의, 성과와 한계

테러리즘이라는 도전과제가 국제적으로 대두되면서 테러집단 등이 핵무기를 획득했을 때 발생하는 핵 안보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 핵 안보는 국가를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안보 문제와 달리 개인, 집단 등 비국가행위자가 행위 주체인 비전통 안보 사안이다. 테러 대상도 불특정해 특정 국가 간 협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핵 안보는 초국가적 협력이 필수적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핵 테러를 국제안보의 최대 위협으로 꼽으며 핵 안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연장선에서 조직된 핵안보정상회의는 2010년 4월 워싱턴 회의를 시작으로 2년에 한 번씩 개최됐고, 2016년 3월 마지막 4차 회의가 열렸다.

제주포럼의 '아시아 태평양의 핵 안보와 안전: 오랜 쟁점과 새로운 사교' 세션에서 핵 안보 전문가들은 핵안보정상회의에 관한 다양한 평가를 제시했다. 긍정적인 평가로는 핵안보정상회의가 최고위급 핵 안보 논의였으며, 각 국가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핵무기와 핵물질을 보유한 국가 수가 감소했다는 점이 언급됐다. 반면 우라늄 농축이나 감축 문제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과 파키스탄과 러시아, 북한이 불참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됐다.

국제 핵 안보 협력 강화 방안 논의에서 전문가들은 정보 공개 및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노부야스 전 유엔 군축 사무차장은 기존 핵안보 지원센터(COE) 등을 활용해 각 국가끼리 테러리스트 정보를 공유할 것을 제안했다. 존 칼슨 핵위협이니셔티브 수석 자문관은 핵 사찰 등 의무 부과와 상호 검토(peer review) 시스템 도입을 이상적인 핵 관리 방법으로 제시했다.

## 핵 군축, 강대국이 먼저 나서야

특정 국가가 자국 안보를 위해 군사력을 강화하는 행위는 주변국에게 불안감을 가져온다. 주변국은 그에 상응하는 군사력을 보유하려고 군비를 증강한다. 이러한 군비 경쟁이 반복되면 자국 안보를 위한 행위가 오히려 안보를 저해하는 ‘안보 딜레마(Security Dilemma)’가 발생한다.

군비 증강은 국제사회의 무정부 상태와 이에 근거한 불확실성 및 불신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한 나라의 독자적 판단에서 비롯된 행동이 가능하다. 반면에 군축은 무기 보유국이 기존 이익을 포기하는 것인 만큼 해당 국가의 의지와 함께 투명성, 국가 간 신뢰가 전제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 간 협력과 충분한 시간, 노력이 필요하다.

군축 이슈 중에서도 핵 군축이 중요한 이유는 핵무기의 가공할 만한 위력 때문이다. 그러한 군사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이 핵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 국제사회는 핵무기의 파괴적 속성을 이해하고 평화를 위해 핵 군축에 노력해 왔다. 그 결과 세계 최대 규모의 핵을 보유한 미국과 소련 간 전략무기제한협상(SALT),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에 이어 2010년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이 체결됐다. 또한 1970년 핵 군축 협상 의무를 명시한 NPT 발효에 이어 1995년 이 체제의 무기한 연장이 결정됐다. 부분적핵실험금지조약(PTBT),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도 핵 군축 협상의 일환이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가능성과 조건1’ 세션의 기조연설에서 핵 군축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특히 북핵 문제

와 관련해 “핵을 이미 보유한 강대국이 북한에 핵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며 강대국을 비롯한 각국의 핵 감축 노력과 이를 위한 협의체 활성화를 강조했다.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도 개최식 기조연설에서 핵보유국들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덧붙여 그는 1972년 남태평양 비핵지대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비핵화를 위해 노력해 온 뉴질랜드의 적극적인 핵 통제 활동을 예로 들었다. 뉴질랜드는 1985년 남태평양 비핵지대조약(Nuclear-Free Zone Treaty)을 체결하고, 1987년 6월 뉴질랜드 비핵지대와 군축법(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을 통과시킨 바 있다.

볼저 전 총리는 신전략무기감축협정을 맺어 미리 양국이 핵무기 감축에 합의했지만 두 나라가 여전히 전 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하고 있으며, 핵무기의 성능 향상을 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핵 문제를 근본적으



“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핵 군축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짐 볼저 전 뉴질랜드 총리

로 해결하려면 핵 군축에서 더 나아가 전 세계의 비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 위협에 놓여 있는 현재 전 세계에 어떤 핵무기도 존재하지 않는 것만이 유일한 안전책이며,

안보 강화의 최종 목적이 평화라면 핵 개발보다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를 해결할 때 그 비용이 더 적다고 덧붙였다.

‘아시아 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과 핵 보유 유혹’ 세션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핵 군축을 위해 서로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두 나라가 핵무기로 동일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상호 취약성’을 인정하고 동반자적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구체적 방안으로 현존하는 트랙 2, 트랙1.5 대화에 더해 정부 간 트랙1 대화를 시작할 것을 제안했다.

### 핵 비확산, NPT로 충분한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사회는 추가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NPT 체제를 구축했다. 그러나 NPT는 비가입국을 통제할 수 없으며 상임기구 없이 5년마다 실시되는 평가회의만 존재해 가입국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다. 그런 이유로 평화를 구축하려면 핵 비확산이 중요하다는 사실에 모두 동의하면서도 몇몇 국가에서는 핵 개발 프로젝트가 진행되어 왔다.

‘핵확산금지조약의 미래’ 세션에서는 NPT 평가와 더불어 핵 비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을 논의했다. 세션에 참가한 전문가들은 NPT의 제도적 강제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이나 국제원자력기구(IAEA) 활용을 제안했다. 샤주캉 전 유엔 경제사회 담당 사무차장은 핵 통제에 특별한 책임이 있는 기존 핵보유국들이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케쉬 수드 전 인도 군축·비확산 대사는

핵 문제의 중심이 유럽과 대서양에서 아시아 태평양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아태 핵 규범을 확립해 선제 공격 금지, 핵 비사용, 점진적 핵 폐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비확산 및 군축을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APLN)는 제11회 제주포럼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태 지역 국가들의 핵무기 감축, 핵물질 관리를 위한 국제기구 가입, 핵물질 절도 및 파괴 행위에 대한 예방조치 개선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APLN은 아태 지역 16개국의 전현직 정치인, 정부 관계자, 학자 등이 참여하는 핵 문제 전문가 그룹으로, 문정인 연세대학교 교수와 라메시 타쿠르 전 유엔 사무총장보가 공동의장, 가렛 에반스 전 호주 외무부 장관이 명예의장을 맡고 있다.

‘아시아 태평양의 지정학적 긴장과 핵 보유 유혹’ 세션에서도 아태 지역 핵 비확산의 중요성이 논의됐다. 전문가들은 핵 보유 3국인 미국·중국·러시아가 핵 비보유 3국 남북한과 일본에 대해 핵무기 사용에 안전 보장을 제공하는 ‘동북아비핵화지대’를 제안했다. 또 다른 방안으로 역내 핵 문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트랙2 방식의 비정부 간 대화와 협력을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해 나가는 ‘나가사키 프로세스(Nagasaki Process)’를 제시했다.

### 제재와 협상 병행

북한 비핵화는 대표적인 핵 비확산 이슈다. 2016년 북한의 4, 5차 핵 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실험 등 일련의 사태로 한반도의 안보 환경이 심각해지고 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방법으로는 정권 교체, 대북 제재, 협상이 주로 거론된다.

북한 정권이 바뀌면 핵을 자연스럽게 포기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는 과거 비핵화 사례에서 비롯된다. 브라질과 아르헨티나는 탈냉전기에 민주정권이 등장해 핵 개발을 자발적으로 포기했다. 우크라이나는 구소련 붕괴 이후 경제 지원과 안전 보장을 제공받는 대가로 비핵화를 실시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냉전 이후 안보 위협이 해소되고 백인정부에서 흑인정부로 교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재와 접촉을 병행해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 송민순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

되면서 이미 개발한 핵을 포기했다. 최근 사례로는 온건파 정부가 들어선 이란이 국제사회와의 핵 협상에 성공한 것을 들 수 있다. 이에 반해 북한은 세습 독재체제로 정권 교체에 태생적 한계가 있다.

핵 비확산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제사회는 2016년 3월 유엔 결의안 2270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해 북한에 대한 전면적인 제재를 시작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제주포럼 개최식 기조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진전에 유엔 결의안 이행이 핵심임을 강조했다. 전직 외교장관 초청 간담회인 ‘동북아 신질서와 한국 외교의 과제’ 세션에서도 대북 제재가 북핵 문제 해결의 주요 수단임을 분명히 밝혔다. 제재의 목적이 제재 자체가 아닌 비핵화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국제사회 제재의 강도, 압박 수준에 따라 북한이 비핵화 협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 말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제재와 더불어 협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6자회담 진행 중에는 중국의 압박으로 북한이 핵 실험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예로 들며 협상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성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중국이 북한 정권의 변화를 추동하는 강력한 동력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며, 주변국들과 의견을 조정하고 협력해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전했다.

‘북한의 비핵화—실천 어젠다’ 세션에서는 협상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이 세션에서 전문가들은 봉쇄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이 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적대적인 반응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장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역내 모든 국가들이 참여하는 포괄적 협상 틀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제하고 역내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 평화 및 비핵화지대 선언을 촉구했다. 황용수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정책센터장은

만성 전력난에 시달리는 북한에게 전력을 직접 공급하거나 발전시설을 제공하는 방안으로 북한과 협상할 것을 제안했다. 와다 하루키 도쿄대학교 명예교수는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가능성과 조건II’ 세션에서 북한이 핵 비확산 노력을 실시할 때마다 경제협력을 제시하는 형식의 협상 방안을 제시했다.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유엔의 역할’ 세션에서는 동아시아가 당면한 최대 도전과제인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간 실패했던 노력을 반복하는 잘못(Einstein’s Insanity)을 다시 범하기보다는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 새로운 시도 중 하나로 유엔 사무총장의 북한 방문을 포함한 중재 역할을 활용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박홍순 유엔한국협회 부회장은 이란 핵 협상 사례 활용, 5자회담 또는 6자회담에서 나아가 유엔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참여하는 8자회담 등 새로운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부영 2015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조직위원장은 한반도 비핵화 달성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코리아 프로세스’를 제시했다. 그 내용은 1) 남북대화 복원 2)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3) 남북 이산가족 상봉과 서신 교환 재개 및 확대 4) 6·15, 10·4 공동선언 합의사항 이행 5) 이미 합의된 남북철도와 도로 연결 사업의 신속 이행 등이다.

## 02 선택기로의 한반도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PRIO)를 창설한 요한 갈통 박사는 평화의 개념을 정립한 '평화학(Paxology)'의 아버지로 불린다. 갈통 박사는 제11회 제주포럼에서 '격랑의 동북아, 평화 해법을 찾는다'를 주제로 열린 특별대담에 참석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상호 대치하는 목표와 호혜성의 부재로 꼽았다. 또한 양측이 얻는 결과가 상호 호혜적이지 못할 경우 갈등과 폭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 평화 담론의 지적 용광로

갈통 박사는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한다. 소극적 평화는 단순히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며, 적극적 평화는 법·제도 등 사회 구조에 내재된 구조적 폭력과 종교·사상·언어·예술 등의 형태로 존재하는 문화적 폭력 개념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한 상태를 말한다. 따라서 적극적 평화를 지향하는 사회에서는 갈등, 분쟁뿐 아니라 빈곤과 환경 문제 등도 평화 담론의 대상이 된다.

제주포럼 조직위원장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갈통 박사의 주장과 같은 맥락으로 단순히 전쟁 없는 평화에서 벗어나 확장된 평화를 지향할

것을 역설하며 '치유의 평화', '관용의 평화', '에너지 평화'를 새로운 평화 개념으로 제시했다. 치유의 평화는 대자연의 치유에 기초한 생태적 평화, 관용의 평화는 개방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포용, 에너지 평화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 과정이 갈등 없이 이행되는 평화를 의미한다. 그는 이와 같이 확장된 평화 개념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는 데 제주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제11회 제주포럼 개회사에서 이런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평화 실천 사례로 '카본프리 아일랜드 제주' 프로젝트와 '평화의 실크로드' 프로그램 등 제주도가 추진 중인 평화 사업을 소개하고, 평화 담론의 지적 용광로, 평화 실천의 인큐베이터, 평화 자본을 만들어가는 평화 기업가로 제주포럼의 역할을 강조했다.

남북한은 전쟁을 종결시키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통일을 지향해 왔다. 하지만 북한의 군사 도발로 발생하는 불안정한 안보 상황을 고려할 때 한반도에는 '소극적 평화'조차 정착되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은 통일 방식에 합의했다. 6·15 공동선언 제2항은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가 지닌 공통성을 인정하고 이 방향으로 통일을 지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 방식은 통일 과정에서 중간 단계의 필요성에 양자가 합의한 것으로, 빠른 시일 내 통일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인식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

###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실제로 정상회담 이후 북한이 지속해 온 군사 도발로 남북 간 긴장이 높아지면서 통일로 가는 길은 여전히 험난하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를 위협하자 북한에 화해와 협력 제의로만 일관할 수 없는 남한은 세계 각국과의 공조를 바탕으로 대북 압박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화를 거부한 채 핵 개발에 매진하고 있으며 통일 논의는 우선순위가 아닌 듯 보인다.

그러자 북한과의 소통 불가능으로 합의에 의한 통일이 어려울 것으로

“평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달성해야 하며, 붕괴론이라는 개념은 붕괴되어야 한다.”

- 요한 갈통 오슬로국제평화연구소 창설자

전망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북한 붕괴론’이 재부상했다. 합의 통일의 대안으로 제시된 흡수 통일의 전제 중 하나가 북한 체제 붕괴다. 북한 붕괴론은 냉전 해체 이후 제기되었는데 경제

사정 악화과 주민 이탈, 리더십 위기로 북한 체제가 갑작스레 무너질 수 있다는 내용이 요지다. 제주포럼에 참여한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이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남주홍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유엔의 역할’ 세션에서 정치적 레토릭이나 추상적 통일 구호에서 벗어나 북한 체제 붕괴와 같은 급변 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하는 위기관리 실천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갈통 박사는 특별대담에서 북한 붕괴를 비현실적 시나리오로 평가했다. 그는 대북 제재가 북한 붕괴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뤄지고 있으나 평화는 평화적 수단을 통해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재에 반대하고 붕괴론이라는 개념 자체의 붕괴를 주장했다. 피터 헤이즈 노틸러스연구소장도 북한이 붕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했다. 그는 ‘북한의 비핵화-실천 어젠다’ 세션에서 각국의 북한 붕괴 조장 정책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더 악화시키고 북한 지도부가 핵 무장을 정당화할 명분만 제공하면서 한반도 불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라 지적했다.

이부영 2015동아시아평화국제회의 조직위원장은 ‘동아시아 평화공동체의 가능성과 조건 II’ 세션에서 “북한의 체제 붕괴를 예상한 이들도 있었으나 북한은 20년간 고립과 제재를 견뎌내고 핵 능력만 더욱 고도화시켰다”라고 말하며 봉쇄나 제재가 북한 체제 붕괴로 이어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사회가 북한 붕괴론의 환상에서 벗어나 포괄적으로 발상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북미 간 대타협(Grand Bargain)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특히 한국이 분단과 대결이라는 기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 주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합의 통일의 조건

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북한 붕괴론을 전제로 한 통일 방안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합의 통일을 위한 토대를 준비하는 것이 남북이 당면한 과제라 할 수 있다.

합의로 평화통일을 이루려면 당사자인 남과 북의 역할과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북핵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에서 합의 통일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정책 추진은 쉽지 않다. 따라서 민간 차원에서 합의 통일을 위한 사전준비가 이뤄져야 한다.

이와 관련해 갈통 박사는 통일 개념에 대한 인식 변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남북은 민족통일과 국가통일이 상이한 범주임을 인식하고 민족통일을 위한 관계를 우선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군사적 측면의 대립과 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통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비군사적 측면의 협력을 바탕으로 관계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독일 기업 지멘스의 조 케저 회장은 ‘통일한국, 기업에서 미래를 찾다’ 세션에서 통일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민과 기업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1989년 11월 동독 주민들이 주도한 평화혁명이 독일 통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통일 후 동서독 간 경제적 격차로 갈등이 일어나 표면적으로만 합쳐졌을 뿐 진정한 통합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독일 국민들은 상부상조하고자 노력해 이를 극복했으며, 이 과정에 기업들이 크게 기여했다. 지멘스는 구 동독 지역에서 2만 명의 직원을 고용하는 등 독일 경제통합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평화적 합의 통일을 이뤄 내려면 당사자 간 노력이 우선돼야 하지만 주변국과 그 외 주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남북분단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이라는 국제적 역학관계의 산물이다. 따라서 분단된 한반도를 다시 하나

“한반도 통일과 평화는  
동아시아 공동체의 조력이 없으면  
실현 불가능하다.”

- 김명희 중앙일보 대기자

로 만들기 위해서는 당사자인 남북한의 노력은 물론 냉전 시기 한반도의 분단에 영향을 미쳤던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의 지지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동아시아 평화공동

체의 가능성과 조건Ⅱ’ 세션에서 김명희 중앙일보 대기자는 독일의 사례에서 주변국 및 강대국들이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처음에 주변국들은 독일 통일에 우호적이지 않았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나치 독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험 때문에 유럽 국가들은 통일이 가져올 독일의 군사력 증가를 두려워했다. 역내 경쟁국 영국과 프랑스는 동서독이 통일될 경우 경제력이 급격하게 상승할 것을 우려해 통일에 적극 반대했다.

그런데도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유럽 통합 과정에서 독일이 주변국들과 신뢰를 구축한 덕분이었다. 독일은 통일 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잔류해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다. 서독은 소련에 경제적 지원을 약속해 통일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 당시 서독의 강력한 우방국이었던 미국은 서독과 소련의 관계 강화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며 영국과 프랑스를 설득하는 데 일조했다.

‘새로운 한중일 협력 관계 구축’ 세션에서 이즈미 하지메 도쿄국제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주변국의 역할과 한중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일을 이뤄 가는 과정에서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두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는 그동안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1991), 한반도비핵화선언(1991), 6·15남북공동선언(2000) 등을 실현하도록 남북이 노력하는 한편 중국과 일본이 이를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합의의 적합성에 대한 논의와 함께 새로운 합의의 필요성도 검토돼야 한다. 둘째는 한중일 정상이 참여하는 정상회의다.

막무르 클리앗 인도네시아대학교 교수는 ‘동아시아 국제관계, 이론과

실천’ 세션에서 한반도 통일을 대하는 아세안의 입장을 설명하면서 아세안 국가들은 군사적 방법보다 우호조약과 대화, 협상 등 외교적 방법을 우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통일과 국제사회: 국제 언론의 역할’ 세션에서도 다른 국가와의 협력 필요성이 강조됐다. 이해 관련 국가와 역내 국가뿐 아니라 역외 국가와의 공조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홍순 선문대학교 교수는 기존에 주목하지 않았던 중동, 아프리카 지역과의 우호관계 강화를 기초로 남북통일 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세션에서 참가자들은 북핵 문제 해결이 한반도 통일을 위한 선결과제라는 공감대 속에 이와 관련한 국제 언론의 역할을 논의했다. 마이클 하워튼 샌프란시스코 이그레미너 편집국장, 스테판 라카르드 라디오 프랑스 인터내셔널 편집위원 등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는 언론의 역할강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미국과 이라크 간 전쟁 등의 사례를 들며 지나친 압박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기도 했다.

# interview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 교수

**이브 티베르기앵**

중국 칭화대학교 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

**연쉐통**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특임교수

**문정인**

## “국제질서 전환의 중심에 한국이 있다”

### 아시아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된 현 상황에서 동아시아 경제 질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지금의 평범한 시대가 아니다. 국제질서 규범이 새롭게 형성되는 역사적 전환기다. 이 전환은 전 세계적 현상이지만 그중에서도 동아시아에서 밀도 있게 나타나고 있다.

각 나라를 잇고 번영을 가져온 세계화로 통합이 지속되고 있다. 세계화는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힘의 균형을 변화시켰는데 그 탓에 동아시아 경제 질서의 제도적 기초가 약화됐다.

이 경쟁의 중심에는 중국과 미국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고정된 현상이 아니다. 새롭게 부상하는 세력도 발언권을 갖기 위해 주도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일부 비평가들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진정한 목적이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통해 중국이 건설하는 동북아시아 질서에 대항하는 위해서라고 주장한다.**

### TPP를 포함한 지역 경제공동체 구축 가능성을 전망한다면?

최근 몇 년간 TPP와 AIIB를 둘러싼 극심한 경쟁이 있었다. 다수의 WTO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던 2007년, 국제 무역 규범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TPP가 제안됐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세계경제의 무역 규범을 개편하고,



이브 티베르기앵 교수는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대학교(UBC) 아시아연구소장이자 아시아태평양재단 선임연구위원이다. 동아시아 비교정치경제 전문가이며, 주요 저서로 <기업국가: 프랑스, 일본,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개혁> 등이 있다.

중국이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미국의 참여를 천명하면서 TPP 논의가 본격화됐다. TPP를 위협으로 여긴 중국은 상하이자유무역지대, 일대일로, AIIB 등 몇몇 이니셔티브에 착수했다.

이러한 전략 대립이 안정된 지금 중국 개혁세력은 TPP를 장기적으로 중국이 가입할 수도 있는 유용한 틀로 보고 있다. 미국은 좀 더 실용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일본 주도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AIIB의 협력으로 미중 간 타협이 이뤄졌다고 볼 수 있다. 세계는 현재 새로운 질서의 혼재 상태에 있으며 이는 아직 기존의 시스템 유지에 방해가 되지 않는 듯 보인다.

###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 수립과 협력적 리더십 구축 측면에서 한국의 역할과 전략은?

한국은 동아시아의 안보 및 경제 사안에서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G20 정상회의를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한 덕분에 유의미한 결과물이 나올 수 있었다. 극심한 변화와 변동성, 새로운 질서를 위한 갈등, 미국·중국·일본·ASEAN 간 긴장 등 모든 것들의 가운데에 한국이 있다.

한국은 신흥국이자 OECD 국가로, 모든 국가행위자들 사이에 있다. 또한 한국은 인적자원이 풍부한 국가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아이디어나 네트워크를 성장시킬 능력을 지닌 한국과 같은 진취적인 중견국들이 필요한 시기다.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싱가포르다. 한국과 싱가포르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진취적 중견국으로 그 역할이 무궁무진하다.

#### **학자 및 연구자들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바는?**

역사적 전환기를 살고 있는 현 시대에는 새로운 아이디어, 청사진, 제도, 메커니즘,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학자들은 이를 실행에 옮길 사고와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다.

학자들은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작업을 넘어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 과정과 사회로 가져가 현실화해야 한다. 이때 학자들의 진취적 태도가 필요하며 특히 차세대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현 시대는 학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동시에 큰 책임이 부여되는 시기다.

#### **제주포럼과 같은 대화 플랫폼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제주포럼에서는 미국, 중국, 일본, ASEAN뿐 아니라 유럽 인사들까지도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눈다. 이들은 매우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방식으로 허심탄회하게 교류한다. 나는 제주포럼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패널들을 만났다. 제주포럼은 학계, 정·재계, 시민사회 및 제주 지역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면서 새로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데 기여해 왔다. 특히 오늘날 중요한 과제인 아시아 평화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었다. 제주포럼은 앞으로 더 성장하면서 측정이 가능한 성과 목표를 만들 수 있다. 제주포럼에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친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기대가 크다. 성과 목표가 거대할 필요는 없다. 전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작은 결과물도 유의미할 것이다.

#### **남북 관계에서 발전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남북 관계는 매우 민감한 사안으로 북한 관련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 특징이다. 김정은은 군사, 핵, 미사일 실험 등 여러 방식의 도발로 권력을 공고히 해 왔다. 이는 매우 놀라운 사례다.

한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관여정책을 펼쳐야 할지, 강경한 입장을 취해야 할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북한의 참여와 대화를 유도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현재 UBC에서 연구 중인 프로그램과 같이 환경, 경제 등 비군사적 이슈에 대한 관여정책이 필요하다.

####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는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는 구축할 수 있지만 그 과정이 매우 어렵다. 새로운 아이디어, 네트워크,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학자, 싱크탱크, 기관, 시민사회가 충분히 존재해야 한다. 역사적으로 볼 때 현실주의적 사고가 빛나는 타성에 지배당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도 우리는 대안적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에 대항해야 한다.

최근 세계 지도자와 국가가 서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사례가 잦다. 때로는 국수주의적인 대응이 갈등과 반목을 조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는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새롭게 접근한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 “기존 다자 안보대화 최대한 활용해야”

남중국해 영토 문제로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빚어 왔다. 중국은 인공섬의 영유권을 주장하며 영향력을 확대하는 반면 미국은 이를 거부한다. 두 강대국의 대립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한다.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군사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응 가능한 중국의 정책은 무엇인가? 미국이 항해 자유를 주장하며 봉쇄정책을 펼칠 경우 중국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가? 이 경쟁에서 승리할 국가는 어느 쪽이라고 보는가?

몇몇 중국 학자들은 두 국가가 직접 충돌할 경우 인구가 많은 중국이 우세할 것이라 점친다. 그러나 남중국해 분쟁은 장기간 이어질 것이며 양국이 현 정책을 지속할 경우 갈등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양국의 해양력이 동등한 만큼 두 나라 모두 양보의 여지가 별로 없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양국이 대립을 줄이고 대화를 더 많이 해야 한다. 상호가 정책 투명성을 확보하면 돌발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서로 이해하면서 잠재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제주포럼과 같은 대화 플랫폼이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은?**

다자 대화를 통해 여러 이슈에 관한 서로 다른 시각을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다. 한 사람의 사고를 변화시키기는 물론 어렵지만 다른 이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도록 돕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남북 관계에서 발전이 필요한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연쉐통 중국 칭화대학교 당대국제관계연구원장은 시진핑 국가주석의 외교 자문역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의 대표적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자로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가 2008년 세계 100대 공공지식인으로 선정한 바 있다. 주요 저서로 <2023년-세계사 불변의 법칙> 등이 있다.

북한에 비핵화만 주장하는 것은 이미 다섯 차례나 핵 실험이 감행된 현 상황에서 비현실적이다. 북한은 앞으로도 핵 실험을 더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이를 막을 수 없다면 남북 관계에 관한 다른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이 핵 실험을 하는 이유는 한반도를 둘러싼 정치적 관계에서 야기된 것이다. 따라서 남북 관계에 진전이 있다면 북한의 핵 보유 사실이 덜 위협적일 수 있다.

**동북아 다자안보 및 협력 체제가 어떻게 달성될 수 있을까?**

지역 평화를 위한 여러 가지 안보체제가 제시됐다.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동북아 지역에서 전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동아시아 국가들이 다양한 다자안보대화체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에는 전 세계 어느 곳보다 더 많은 안보대화체가 존재한다. 각국이 이 대화체들을 활용하고 발전시키면서 안보 증진과 전쟁 방지에 기여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 대화체들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 수 있다.

## “제주포럼은 동북아 평화 인큐베이터”

지난 10년간 동아시아 지역 질서가 눈에 띄게 변화해 왔다. 그 대표적 사례가 미중 간 경쟁이다.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가 여전히 효과적인 정책수단인가? 미중일러 등 강대국을 포괄하는 다자안보체제 건설이 한국에게 효과적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동아시아 다자안보체제는 실현이 가능하다. 현재 동아시아에는 두 가지 경쟁적인 안보 패러다임이 존재한다. 첫째는 동맹에 기초한 집단안보체제로 역내 많은 국가들이 이를 지지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제안한 것으로 이는 운명공동체 방식 또는 협력적이고 포괄적이며 공통적이고 지속가능한 안보를 추구하는 다자협력체제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현재는 이 두 패러다임이 상충하는 듯 보인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동아시아는 다자안보체제가 필요하다. 지금의 동맹체제는 공통된 위협과 적의 존재를 가정하고 각국의 협력보다는 끊임 없는 역내 불안정을 유발하는 편 가르기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자안보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정부에서 제안한 다자안보구상이다. 노무현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각각 동북아협력구상과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을 제안한 바 있다. 또 다른 방안은 6자회담으로 돌아가 9·19 공동성명, 특히 모든 당사자들이 다자안보체제를 만들기 위해



문정인 교수는 한국의 대표적 국제정치학자로 평화번영정책 이론을 구축했다. 제1, 2차 남북 정상회담에 특별 수행원으로 참여했으며, 대통령 자문 동북아시아위원장과 외교통상부 국제안보대사를 역임했다. 세계경제포럼(WEF) 교수요원 및 미래한국아젠다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명예특임교수이자 동아시아재단 이사, 아시아태평양리더십네트워크(APLN)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힘써야 한다는 조항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다. 이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을 성공시킬 뿐 아니라 다자안보체제를 부활시키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위해 제주포럼을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2007년 제5회 제주평화포럼에서 제주평화선언이 채택됐다. 이 선언에는 제주가 역내 협력과 다자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아이디어 창출의 허브로 활약할 것을 제안하는 ‘제주프로세스’가 담겨 있다. 이 모델에서 제주포럼은 동북아 평화의 인큐베이터 역할을 수행한다. 만약 중앙정부가 제주프로세스에 관심을 갖고 제주포럼의 역할을 강화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는 강력한 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동시에 다자안보 협력을 위한 실행 가능한 아이디어 형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평화연구원이 대중과 차세대를 교육해 평화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면?**

네 가지가 있다. 첫째, 제주평화연구원을 평화 활동의 플랫폼으로 지정해 대

중과 차세대가 평화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평화 관련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제주포럼은 전문가, 정책결정자, 시민사회 리더 사이에서 아이디어와 정책 교류를 위한 허브로 기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도가 세계 평화의 섬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제주평화연구원과 제주4·3평화재단은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평화 교육 커리큘럼을 실행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 해당 분야의 활동이 크게 진전됐다고 보기 어렵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재단과 협력해 제주도를 매력적이고 선구적인 평화교육의 중심으로 만들어야 한다.

#### **평화 증진을 위한 싱크탱크의 역할은?**

평화는 싱크탱크로부터 시작된다. 국내 싱크탱크들이 평화 확산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더 많은 연구자들 간에 국제적 네트워크를 실현시켜 평화 증진과 평화이론 연구를 확산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제주포럼 창설과 발전에 공헌해 온 입장에서 제주포럼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면?**

제주포럼은 2001년 출범 이후 양적 성장을 거두었다. 하지만 청중의 질 또한 향상돼야 한다. 정책결정자, 전문가 등이 모여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논하는 엘리트 포럼으로 발전하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원희룡 제주포럼 조직위원장은 평화, 혁신 및 경제 발전, 환경, 문화 네 분야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의미 있고 영향력 있는 아이디어와 결과를 창출하기 위해 좀 더 구체적인 어젠다를 구상해야 한다.



제2호 2016-2 | 발행 2016년 12월 9일 | 발행처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 등록 제 652-2008-00002호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우) 63546 | 전화 064-735-6533 | 팩스 064-738-6539 | 전자우편 jejuforum@jpi.or.kr | 홈페이지 www.jejuforum.or.kr | 디자인·제작 DesignZoo

© 제주포럼 사무국 이 글은 2016년 5월25~27일 열린 제11회 제주포럼에서 발표된 내용과 인터뷰 내용을 제주포럼 사무국이 요약 정리한 것이므로 제주포럼 조직위원회 공식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비매품 >

# JEJU FORUM REVIEW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사무국 | 63546,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Tel 064-735-6533 Fax 064-738-6539 Email [jejuforum@jpi.or.kr](mailto:jejuforum@jpi.or.kr) Website [www.jejuforum.or.kr](http://www.jejuforum.or.kr)  
Facebook [www.facebook.com/jejuforumpp](http://www.facebook.com/jejuforumpp) Blog <http://blog.naver.com/jejuforum>

〈 비매품 〉



9 788993 764123

ISBN 978-89-93764-12-3 (전 4권)